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TEL : 553 - 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럽 의회의 반덤핑 보고서

유럽 의회의 대외 경제관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EC 집행위의 현 반덤핑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동정책이 보호주의 무역을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없으나, EC 산업으로 부터의 제조 접수의 발표를 요구하므로써 EC 반덤핑 절차의 명료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가 국내 산업에 야기되고 관련산업의 대부분이 덤핑조치에 찬성하고 동 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덤핑이 존재 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의 주된 불만은 EC의 반덤핑 정책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EC 집행위, 한국산 소형 CTV 반덤핑 조치 재심

EC 집행위는 향후 수일내 한국산 소형 CTV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의 부분적인 재심을 발표할 예정인데 동 재심(Review)은 덤핑 조사기간에 협조하지 않았던 업체들에게 부과된 잔여 최고세율(Residual duty)의 재심사에 제한되는데 EC 산업 및 관련된 한국 업체들은 견해를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3. EC 집행위, 중국, HK產 소형 CTV에 잠정 관세 부과 발표 예정

오랜 지연끝에 집행위는 중국과 HK產 소형 CTV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88. 11월에 개시된 집행위의 조사는 양국에서 수출된 CTV의 원산지에 대해 절차상의 어려움과 의혹으로 애로를 겪었다.

중국 : 7.5% - 17.4%, HK : 2.1% - 4.8%

4. EC, 한국·일본산 수입품 감시 지속 결정

EC 집행위가 역내 수입품을 계속 감시키로 한 대상 품목에는 한국산 VCR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1986년 이래 발효되어 매년 재심을 하고 있는 감시조치를 1991년까지 연장키로 집행위가 합의하였으며 일본산 VCR과 CTV, 음극선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동 Monitoring System은 미국이 제한조치를 부과해오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도 적용되어 양 지역 시장간의 교역 흐름의 균형을 통제케 될 것이다.

5. 미국산 일본 자동차 EC Quota에서 제외

EC에 수입되는 일본 혼다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일본산이 아닌 미국 제품으로 간주되어 EC Quota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동사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릴 의도이다.

6. EC, 미·일 합작 지지

EC 집행위는 미쓰비시의 미국 Union Carbide의 카본 영업 부문, UCAR Carbon사와 19개 자회사의 지분 50% 매입에 대해 EC 역내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동결정은 집행위가 1990.9 채택된 EC 합병 규정을 합작에 적용한 첫 케이스로 중요한 선례가 되며 또한 두 역의 업체들에 대한 첫번 케이스도 된다.

합병 규정에 의해 집행위에 위임된 권한은 합병 관련사들의 총 전세계 매출액이 50억 EC U이고 관련사들의 최소 2개사가 각기 역내 매출액이 2.5억 ECU를 초과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7. 伊, EC 단일시장관련 Community 규정 채택

유럽 단일시장의 시한이 근접하고 있는데 이태리 의회는 "1990 Community Law"를 드디어 채택하여 이태리 정부로 하여금 131 EC Directive를 이행하고 국내법에 반영토록 했다. 이제 이태리 정부는 늦어도 12월 이전까지 모든 실행 법조문과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8. 미·일 반도체 협상

'91.1월 첫주 윌리엄스 USTR 부대표와 슈토무 마키노 일본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장은 금년 7월 종료되는 현행 반도체 협정 연장 문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현재의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협의될 것으로 보이며 기 보고하였듯이 미국의 컴퓨터 및 반도체 업계는 공동으로 현재의 안을 약간 수정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9개의 전자단체는 공동으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와싱턴 통상정보에 의하면 미국의 협상 입

장은 업계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데 새롭게 5년간 유효할 협정을 희망하며 20%의 시장 점유율의 달성을 위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일본에 시간을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일본은 계속하여 특정한 시장점유를 확약한 바 없다고 주장)

또한 일본은 EPROM과 DRAM에 대한 반덤핑 유예 협정과 칩의 덤핑 여부를 결정키 위한 공정 시장가격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12월 19일 EIAJ는 미국이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 보장을 전제하고 1억6,500만불 상당의 일본 상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철회한다면 새로운 반도체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EIAJ는 또한 새로운 협정과 일본 반도체 수입에 관한 1985년에 유예된 301조 조사와의 연계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예조사 조항에 따라, 미국은 1987년에 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현행 협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시 언제라도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끝으로 EIAJ는 EPROM과 DRAM에 관한 A/D 유예 협정의 종료와 외국 공정가격 심사안에 따른 가격감시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일본의 EPROM 제조업체들은 이미 그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유예협정의 종료를 상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SIA는 이에 반대하였다.

덤핑에 관하여 일본의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덤핑 주장에 대하여 제3국의 업체보다도 짧은 시간내에 답변하도록 SIA/CSPP에 의해 제안되어온 특별 "신속승인" 절차에 대하여 EIAJ는 반대하였다. 미국의 업계 대변인은 주로 의회의 압력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협정에서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이점에서 UR 협상에서의 일본 역할에 대한 의회의 검토와 통상분야에서의 우방이란 점이 그들의 희망적 기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미국의 강경한 협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의 대미 반도체 수입이 '90 1/4분기 12.3%, 2/4분기 12.6%, 3/4분기 12.1%에서

최근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9. 미 협회의 통상관련 활동전망

102회 회기가 1월3일 개최되었다. 페르사만 사태로, 예년과 달리 이번 달에 회기중 기간이 많을 것이다. (보통 1월달은 휴회 기간이 많음) 의회가 페르사만 사태로 정신 없지만 통상을 비롯한 다른 사안들도 다루게 될 것이다. 3월은 의회의 통상현안 심의에 중요한 달이 될 것이다. '91. 3. 1까지 대통령은 특별 신속 승인절차에 따라 대의회 통상협상안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의 부여된 권한은 '91. 6. 1 소멸되는데 이 경우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시한을 허용치 않게 된다. 통상 협정 검토시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변경을 금지하는 신속승인절차 없이는 그러한 자유무역조치는 정상적인 입법절차하에서는 효력 발생이 거의 불가능하다. 상·하원에서 다수결로 “불가” 판정이 없는한 1993년 6월 1일까지 2년간 신속승인 권한은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의회의 대멕시코 협상 반대는 신속승인절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입세출 위원회의 반수 이상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37명의 의원들이 대멕시코 협상을 위한 신속승인 절차의 사용에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들은 환경문제, 노동자 권리, 정치적 개혁, 마약통제 등 개선사안들이 FTA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입장은 멕시코에 대하여 인기없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FTA를 좌초시키거나 무한정 연장시키는 조치를 의원들이 지지토록 허용할 것이다.

새 의회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2년은 점증하는 당파적 이해로 특징지워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회 첫날 하원은 예산에 관한 공식적인 집계를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이 아닌 의회 예산국이 담당토록 하는 규정 변경 시도로 부

시 행정부를 노하게 했다. 백악관은 지난 가을 양측에 정치적 고통을 안겨준 예산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백악관의 우선적인 목표는 수누누 비서실장이 밝혔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1993년 의회이다. 이것은 행정부가 협조보다는 대결에 관심이 있으며 의회도 이와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불경기 기간과 정도에 따라 102회 의회는 자유무역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지난 2년 보다도 더욱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추가로 하원 다수당 리더인 게파르트 의원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문제를 잠재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이슈로 시험하게 될 것이다. 점증하는 당파주의가 이러한 요소를 악화시킬 것이다.

10. 칼라힐즈, “통상에 대한 한국 입장 변경없을시 불가피” 경고

칼라힐즈 USTR 대표는 브뤼셀 회의후 수차례에 걸쳐 한국이 수입규제를 중단하지 않는한 한국에 용인되었던 무역혜택을 철회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USTR 관리에 의하면, UR에서의 한국의 자세와 수입 반대 운동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제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12월 29일 TV쇼에 출연하는 힐즈 대표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정책의 변경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국에 허용되는 각종 혜택을 확실하게 철회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지난 12개월간 한국은 그 이전보다 건설적이지 못하였으며 한국은 무역을 통하여 발전을 이룩한뒤 안으로 문을 걸어 잠구었으며, 외국 물품의 수입금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에 관한 최근의 EC 제안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에서 그리고 1월9일자 “저널 오브 커머스”와의 회견에서 힐즈는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경제적 잇점을 누리고 있으나,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다면 우리는 한국에 이러한 잇점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힐즈를 직접 언급치 않고, 이 기사는 한국이 UR 농업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의 반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조시 볼테 USTR 사무총장은 1월 8일 업계 대표에게 UR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다음주 서울에서의 양국 차관급 통상회의에서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한 회담은 일반적으로 거시 경제사안에 초점을 둠). 볼테는 농업부문이 실망의 주요 원천이지만, 한국은 시장 개방협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을 해왔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보고서는 국제수지 면제와 서비스 부문을 추가적으로 UR에서의 한·미 양국간 의견 불일치 분야로 열거했다. 행정부 관리들과 통상관련 언론보도는 한국과의 마찰이 의회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90. 1. 4일자 워싱턴에 소재한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수퍼 301조 갱신의 정상화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강화된 무역정책 적용의 주대상이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퍼 301조는 지난 봄 효력이 종료되었다. 행정부는 301조로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수퍼 301조를 갱신키 위하여 성안된 어떠한 법안도 행정부의 재량권을 더욱 제한하고 영구적인 법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 입장에서 볼때 수퍼 301조는 성공적인 장치였는데,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제재 대상국이나 잠재적 대상국으로부터 주요한 의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구분된 국가(일본, 브라질, 인도) 중에서 미국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교역국인 인도만이 조사의 종료를 위해 미국에 호혜적으로 무역관행을 바꾸는데 실패하였다. 볼테는 행정부가 한국에 관한 견해를 의회로부터 듣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른 관사들은 의원들이 USTR에 누가 브뤼셀 회담 결렬에 책임

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수출 경쟁력 때문에 회담에서의 여론이 안 좋으며 한국의 통상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민감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장관이 이끄는 새로운 통상팀의 임명이 한국의 정책변경을 가져올지는 확실치 않다. UR 및 대멕시코 FTA 협상 등 무역 자유화 조치로부터의 정치적 난관을 극복키 위해 통상부문에서의 "강경함"을 증명할 필요성 때문에 한국은 불행하게도 행정부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수입반대운동과 뒤이은 브뤼셀에서의 한국의 역할에서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로 한국은 1989년 수퍼 301조 지정을 모면한것 처럼, 다시한번 미국의 제재를 미리 피할 수 있는 극적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11. 타결 전망 아직 불투명

다음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TNC 회의는 브뤼셀 통상 장관회담 이후 최초의 공식회담이다. 브뤼셀 회담이후, 미국 관리들은 UR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였다. 미국의 입장은 기타 분야에서의 회담 재개 전에 농산물 부문에서의 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EC가 주장하는 축소된 개혁안을 수락한다하더라도 농산물 수출국이 회담을 보이코트하기 때문에 UR은 성공키 어렵다는 것이다.

1월4일, EC 농산물 위원회 맥 새리 위원은 1986년 수준에서 국내 농산물 보조금을 30%까지 감축하며 그 손실을 농민에 대해 직접적인 복지지원으로 보상하는 안을 EC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EC 집행위는 1월 19일 본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접근 방법은 미국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힐즈 대표는 이 안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러나 EC안은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수출 보조금과 시장개방 금지에 대한 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1월 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스웨덴의 헬스트롬 농업장관이 "EC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하여 기꺼이 협상할 것이며, 1개월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UR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설과 낙관적인 설이 함께 나돌고 있다. 낙관적 측면에서, US TR의 조시 볼텐 사무총장은 사석에서 미국 통상관리들이 취해온 공식적인 태도보다 더욱 낙관적이었다. 그는 "거의 모든 협상 그룹에서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미국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활용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대의회 통보기한인 3월 1일까지 종결짓기 어려운 단하나의 분야는 특정 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개방 문제이다. 그러나 볼텐은 미국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 계속이 가능한 체제의 구축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와싱턴에서는 협상 대표들이 1월 22일 주에 협상 종결을 위해 비상 대기태세로 들어갔다는 루머가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다른 USTR 관사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UR에 대한 고위급의 정치적 효력은 뒷전에 쳐지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부시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농산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차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도 2월까지는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의회가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하게 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법에 따르면 신속승인 절차를 위하여 주어진 90일까지 행정부가 의회에 완전한 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현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신속승인에 유효한 '91. 6. 1까지 협상의 종결과 서명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그러나 미 의회는 미·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로이드 벤슨 상

원 재무위원장과 로스텐코우스키 하원 세입세출 위원장은 각각 최종 다자간 무역협상 안이 '91. 3. 1까지 종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점에서 상·하원과 행정부는 대 Mexico 자유 무역 협정에 요구되는 복잡한 권한 연장보다는 현행 협상 권한에 따라 다자간 무역 협상을 종결 짓기를 희망할 것이다.

12. 미국 산업 전망

(1) 개괄

미 상무부는 '91년 미국산업전망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90년의 1.38%로 경미한 둔화가 예상되나 일부 산업은 성장 기대(컴퓨터, 전자) 컴퓨터, 주변기기는 5.6%('90 : 4.4%), 전자부품 6.2%('90 : 1.8%) 성장이 예상된다.

기타 금년에 건설한 성장예상되는 부문은 공작기계(5%), 항공기 및 부품(4.6%), 성장부진 예상부문은 건설, 건축자재, 목재, 철강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및 부품, 가정용 내구재 등이다.

지난 수년간 점진적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중요 역할 담당. 1990년 1/4~3/4분기 동안 수준이 GNP의 70% 차지, 업계는 수출이 계속하여 국내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성장률은 '91년에 8%로 작년의 12%보다 낮으나 아직도 중요한 부문을 차지 컴퓨터, 전자부품, 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수출주종 품목이다.

1) 전자부품/장비

전자부품

미국의 전자부품 실적은 '91년에 6.6% 증가가 예상되며('89/'90 : 1.3% 증가) 국내 시장 판매보다 대유럽과 아시아 수출량이 크게 증가 예상되며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6~8% 교역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교역은 '89/'90의 -1.1% 성장과 비교하여 '91년에 9.0%의 괄목할 성장 기대. 미국의 무역적자는 '89~'90년 사이에 25억불에서 15억불로 감소되며 수출은 '90년에 9.7% 증가 기록하고 수출증대는 일본과 EC쪽보다는 동아시아쪽으로의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한국의 미국 반도체 수입은 '90년에 19.5% 증가하여 홍콩의 23.6% 증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91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은 10% 증가 전망. 한국은 계속하여 미국 반도체 수출의 훌륭한 시장이 될 것이다(특히 High-end부분).

미국 국내 반도체 시장은 8% 증가 예상되며 통신 부문 '89~'90의 미국 반도체 수입은 금액상 20% 감소, 미국의 대한 반도체 수입 1% 감소, 대일 수입 14.3% 감소, 대멕시코 수입 0.6% 감소 그러나 대가수입 7.3% 증가, 대EC 수입 7.8% 증가, 대필리핀 수입 12.9% 증가, 대태국 수입 8.8% 증가했다.

전자부품 부문의 미국 무역흑자는 '89/'90에 24% 개선되어 170억불에서 130억불로 감소하였으며, '91년에 10억불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대유럽과 극동의 수출증가 21%, 수입은 13% 증가 전망이다.

2) 컴퓨터 장비/소프트웨어

컴퓨터, 컴퓨터 저장기기, 터미널,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91년에 미국 교역 5.9% 성장 예상('88/'90 : 4.4%) '90년에 수출 15% 증가했다. 미국 수출의 47%가 EC, 13%가 일본, 캐나다가 차지 대부분 주변기기와 부품의 수입증가로 1990년 수입 8% 증가. 수입증가로 최초로 이 부문의 무역 적자 발생했다. 이 부문의 교역형태는 국제적인 구매선 확보를 반영했다. 국내소비는 '90에 4% 증가('89 : 17% 증가). 수입증가는 '91에 계속하여 수출을 능가할 것이다. '91 P/C 교역 6~9% 증가 포터블 컴퓨터 교역증대 48%로 \$80억 예상했다.

3) 가정용

가정용 전자제품의 실적은 '90년에 '89년보다 2.5% 감소. '91년 실업과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다시 4.2% 감소 전망. MWO의 교역이 시장의 포화로 특히 저조하며 -30% 성장. 중국과 멕시코가 최근 한국, 일본과 함께 가정용 전자제품의 주공급자로 참여하였다.

향후 5년간 가정용 제품의 선적은 매년 1%의 증가 예상. 제품간의 차이보다는 가격과 품질에 초점을 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1990년 미국 반도체업체 시장점유 증가

데이터 퀘스트에 의하면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업체는 12년만에 처음으로 1990년에 세계 시장 점유 증가. 미국 반도체 업체 2% 증가하여 세계 시장의 36.5% 차지하고 주로 인텔과 모토로라가 주도하였는데 인텔은 '89~'90기간에 29%, 11%의 수입증가를 기록했다.

NEC, 도시바, 히다찌는 가격인하로 각각 1%의 감소가 있었고, TI(-8%), 오키(-7%), AT&T(-5%)의 더욱 큰 감소 기록하였다. TI와 AMD는 3%의 수입 감소로 6위→7위, 18위→19위로 시장 점유 하락 기록. 삼성은 4%의 수입 증가가 있었으나 14위에서 18위로 하락하였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공급 과잉의 DRAM 시장에 치중한 까닭에 '82년 이후 최초로 시장 점유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생산업체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로직 칩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 퀘스트 반도체연구그룹의 이사는 제한된 시장 증대 시기에 한국 업체의 시장 진출로 DRAM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14. EC, 기업흡수 : 합병 규정 (Community Dimention Mergers)

EEC Merger Control Regulation : EC 집행위는 역내 산업과 관련한 M&A를 통제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되는 기업간 흡수·합병을 본 규정에 의거 통제하게 된다.

1. 발효 : 1990. 9. 20.
2. 규정적용 기준금액(매출액 기준) :

○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총 전세계 매출액 : ECU 5 Billion 이상 (£ 3.5 Billion / U \$ 6.5 Billion)

○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최소 2개 이상의 각각 EC 매출액 = ECU 250 Million 이상

○ 이때 각기 EC 역내 매출액의 2/3 이상이 동일한 EC 1개 회원국내에 국한된될 경우는 제외

○ 매출액은 합병에 직접 관계하는 회사의 것만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그룹 차원의 것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것을 포함한다.
: 그룹의 관계

= 50% 이상의 자본이나 자산을 소유
=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Voting rights) 행사
=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 임원 임명권

○ 사업체의 일부분만을 인수하는 합병의 경우, 인수되어지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매도인의 매출액으로 간주한다.

○ 매출액은 판매 리베이트, 부가가치세, 기타 매출세액을 공제한 전회계년도 판매액을 기준(그룹 내부간 판매분 제외).

예 1) A그룹내의 한 회사가 B그룹을 인수하는 경우

(단위 : ECU Million)

	Group(A)	Group(B)
전 세계	3,500	2,500
E C	2,000	2,000
회원국 X	1,400	200
회원국 Y	200	1,400

- i) A, B그룹 전세계 매출액 = ECU 6Billion
EC내 매출액 = ECU 250Million 초과
- ii) 두 그룹이 각각 역내 한 회원국내의 매출액이 70% (2/3가 초과)가 되나 단일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규정에 적용됨.

○ 역내 매출액은 EC 회원국내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매출

○ 매출액의 환율은 지역화폐를 회계년도 평균 ECU 환율로 환산

○ 은행 및 금융기관 매출액
= 자산 대 대부금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
보험회사
= 총보험 가입금액(Gross Premiums)

예 2) A그룹내의 한 회사가 B에 속한 한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Group(A)	Group(B)	
		Total Group	Relevant Business
전세계	4,000	3,000	1,500
E C	2,000	1,500	200
회원국 X	1,500	400	100

- i)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사업부문의 매출액 ECU 5.5Billion
- ii) A그룹의 EC 매출액은 기준액인 ECU 250Million을 넘겼으나, B그룹의 사업부문이 이에 미달됨으로 규정에 적용안됨.

예 3)

	Group(A)	Group(B)	
		Total Group	Relevant Business
전세계	4,000	3,000	1,500
E C	2,000	1,500	400
회원국 X	1,500	400	300

- i) 이 경우는 전세계 매출액 및 EC 매출액이 한도액을 넘고 있으나, 이들의 각각 EC 매출액의 75% (2/3기준 초과)가 1개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규정에 적용안됨.

3. 규정 적용 대상

○ EC 역내 기업간 합병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간 합병에도 적용됨. (단 매출액 한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4. 현행 매출액 한도는 1993년 재검토되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전세계 매출액 = ECU 2Billion

EC 매출액 = ECU 100Million